

제52권: 2008. 10. 22.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1. 개요	1
2.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	2
3. 식품안전과 친환경농산물 인식	5
4. 농촌생활 여건과 복지	10
5.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13
6. 시사점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동원** 부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2008년 2월 새정부 출범 이후 농업정책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요구도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새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한달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을 지원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여론과 변화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파동과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 국제 원유값 급등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 국제 곡물값 폭등 등 지난 3분기 동안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던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들의 인식과 의식변화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2,000명(666건 회수)을 대상으로 도시민은 방문면접을, 농업인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새정부에 대한 농정 수요, 식품안전, 농촌 생활여건, 농업·농촌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등이었으며 여기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 **도시민(면접 1,508명)**: 전국 도시지역 19세 이상 성인남녀(제주도 포함)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로 표본 선정, 1:1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2.5\%$ point>
- **농업인(응답자 666명)**: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2,000명 대상 우편 조사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독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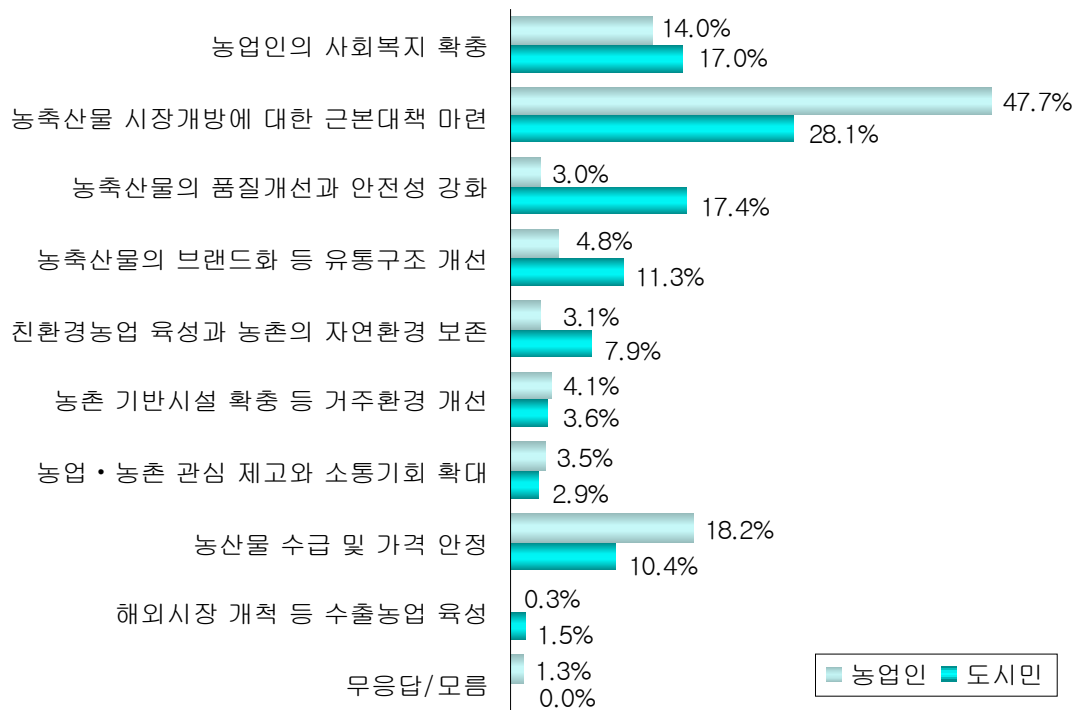
2.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

2.1.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시장개방 대책’

도시민과 농업인은 새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로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도시민 28.1%, 농업인 47.7%)을 꼽아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새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사¹⁾에서도 농업인들이 새정부 최우선 농업정책 과제로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꼽았던 것을 감안하면 농업인들은 ‘개방 피해대책’을 가장 큰 정책요구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1) 2008년 1월 한달간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방에 따른 대책’ 다음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뚜렷이 구별되는데,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17.4%)를 꼽은 반면 농업인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18.2%)을 꼽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수출농업 육성’, ‘국민 관심제고와 소통기회 확대’, ‘거주환경 개선’ 등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정책 관심도가 낮은 분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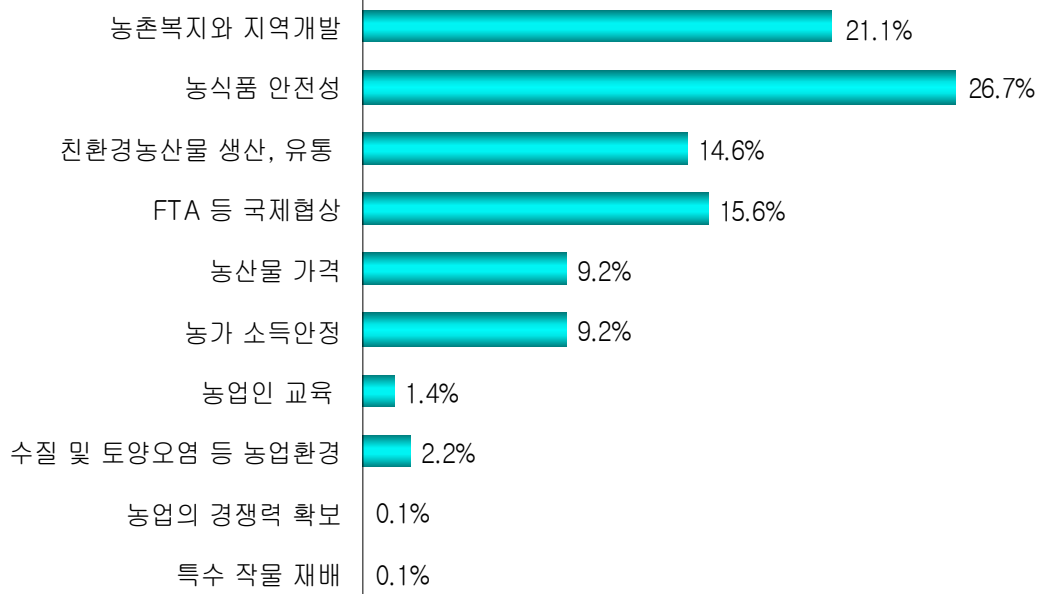
2.2. 도시민 55.1%, “평소 농업·농촌문제에 관심있다”

평소 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도시민은 절반이 넘는 5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별로 없다’(42.1%)거나 ‘전혀 없다’(2.8%)는 응답자도 과반수에 가까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정책 분야 1순위는 ‘농식품 안전성’(26.7%), ‘농촌복지와 지역개발’(21.1%)로 응답하였고, ‘FTA 등 국제협상’(15.6%),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14.6%)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도시민이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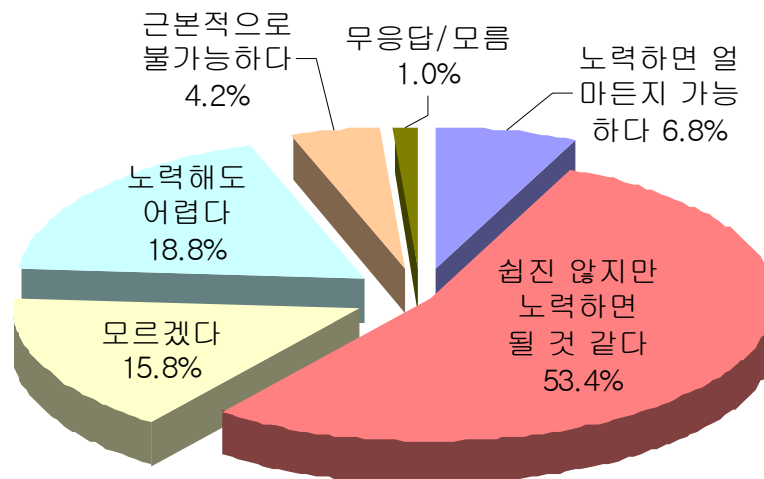


2.3. 농업인 10명 중 6명은 “수출농업 가능성 있다”

정부가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과반수가 넘게(60.2%)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농업인 비율은 23.0%로 나타나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했고, 15.8%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그림 3. 새정부의 수출농업 추진에 대한 견해(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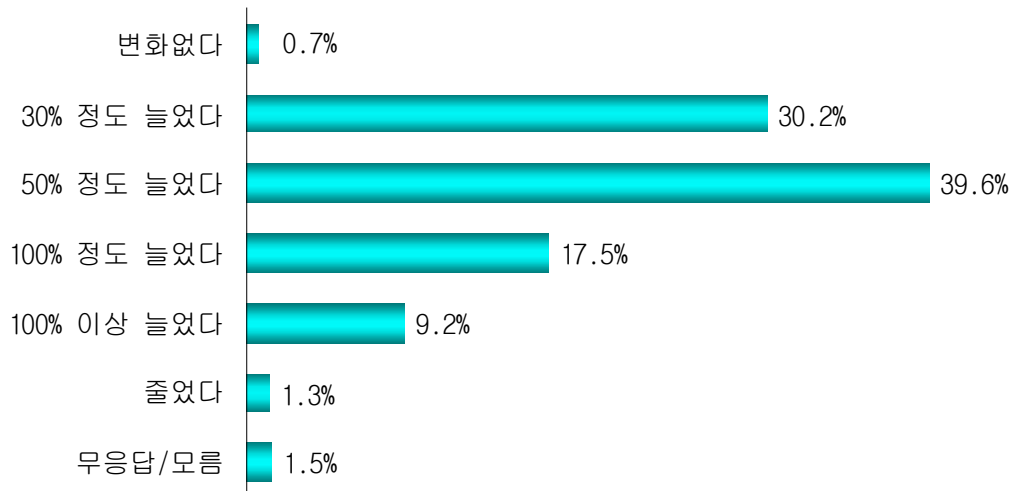
2.4. 농가 96.5%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용 증가”

비료값과 사료값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변화에 대해 69.8%가 1년 전보다 30%~50% 정도 생산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100% 정도와 100% 이상 증가했다는 농가도 26.7%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생산비 증가에 대응해 재배작목을 축소했다는 농가가 35.4%, 작목을 전환했다는 농가가 20.3%, 재배를 포기했다는 농가가 11.1%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해 극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23.3%로 조사되었다.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지원 우선 순위로는 비료, 기름, 농자재 순으로 꼽았다.

그림 4.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1년간의 생산비 변화(농업인)



3. 식품안전과 친환경농산물 인식

3.1. 도시민, “육류와 곡물 구입 시 ‘원산지’부터 확인한다”

도시민들은 채소와 과일, 수산물, 외식 시에 ‘품질(맛)’이 우선 선택 조건이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그 중 과일과 외식은 ‘품질(맛)’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이 50%를 넘었다.

이에 비해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국산/수입산)’를 보고 구입한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조건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각 43.8%, 40.3%) 국산과 수입산 여부가 주요 구입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개 조사 품목 모두 15.8%~32.1%로 높게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농축산물과 식품 구입 시 고려 사항(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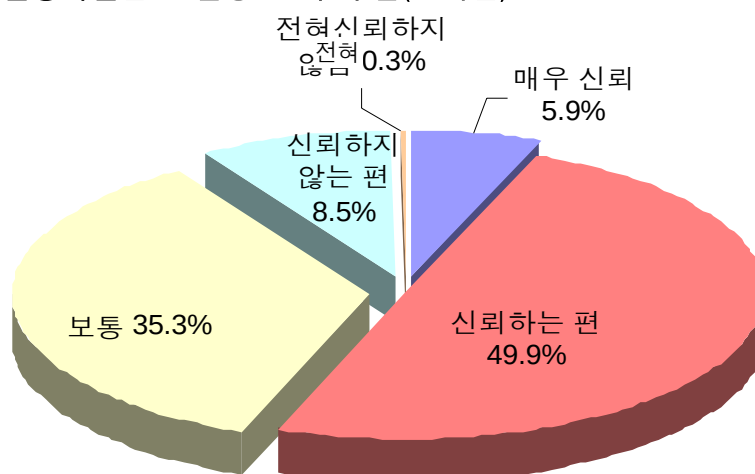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가격	9.1	7.9	8.1	6.5	7.1	14.9
안전성	32.1	23.6	19.4	18.1	26.7	15.8
품질(맛)	36.1	20.1	24.9	56.4	34.9	50.7
브랜드(인지도)	1.3	3.6	5.5	2.2	2.2	5.2
원산지(국산/수입)	19.4	43.8	40.3	16.0	28.2	9.8
기타(영양 등)	2.1	1.0	1.9	0.7	0.8	3.4
모름/무응답	-	-	0.1	-	0.1	0.1
계(N=1,5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2. 도시민 55.8% “국산농축산물 안전성 신뢰한다”

도시민 55.8%가 국산농축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에 그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림 5. 국산농축산물 안전성 신뢰 수준(도시민)



수입농산물에 비해 국산이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77.9%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30.5%는 90점 이상, 47.6%는 80점~89점으로 평가했다.

3.3. ‘미국산 쇠고기’ 구입 의향 도시민 10명 중 1명 꼴

수입식품을 구입하겠다(매우 많다, 많은 편 합산)는 도시민 비율이 품목별로는 수입쌀 6.2%, 미국산 쇠고기 10.6%, 호주산 쇠고기 19.0%, 수입과일 21.4%, 수입 가공식품 14.5% 등으로 나타나 쌀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하였다.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완곡한 의견은 70.5%로 수입쌀(76.1%)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반해 수입과일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2. 수입식품 구입 의향(도시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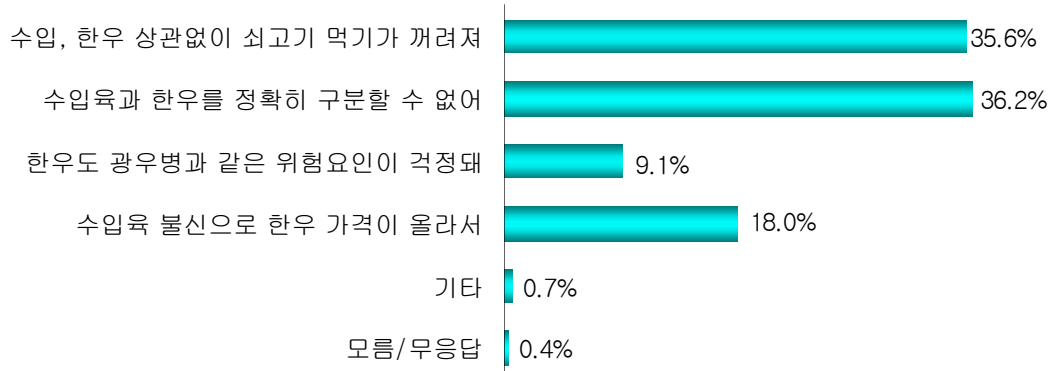
구분	수입 쌀	수입 쇠고기			수입과일	수입 가공식품
		(미국산)	(호주산)	(기타 국가)		
① 매우 많다	1.2	1.8	2.7	1.1	2.4	1.6
② 많은 편	5.0	8.8	16.3	6.4	19.0	12.9
① + ②	6.2	10.6	19.0	7.5	21.4	14.5
③ 보통	17.8	19.0	37.7	27.0	45.4	41.7
④ 없는 편	27.5	26.7	22.3	30.2	18.7	24.5
⑤ 전혀 없다	48.6	43.8	21.0	35.2	14.5	19.3
계(N=1,5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 도시민 10명 중 3명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 줄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응답이 30.6%로 나타났다. ‘늘었다’는 응답은 7.8%에 그쳐 소위 ‘광우병 소동’이 한우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할 수 없어서’(36.2%), ‘쇠고기 먹기가 꺼려져서’(35.6%)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6. 한우 소비 줄인 이유(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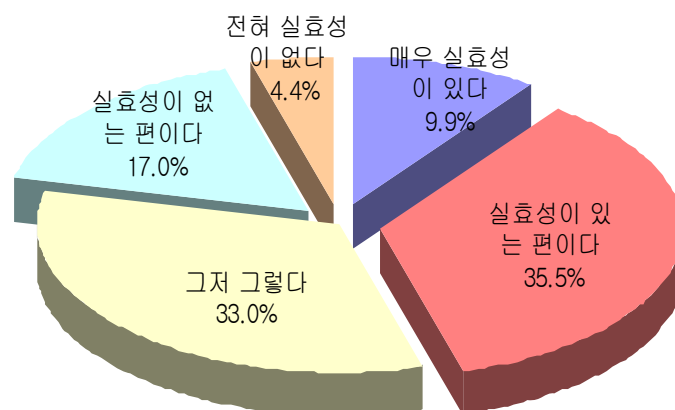


3.5. 도시민 45.4% “원산지표시제 강화조치 실효성 있다”

식품구입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한다는 도시민 비율이 74.6%로 높게 나타나 도시민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원산지 표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45.4%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1.4%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33.0%는 ‘그저 그렇다’로 평가를 유보하였다.

그림 7. 원산지표시제 강화 조치 평가(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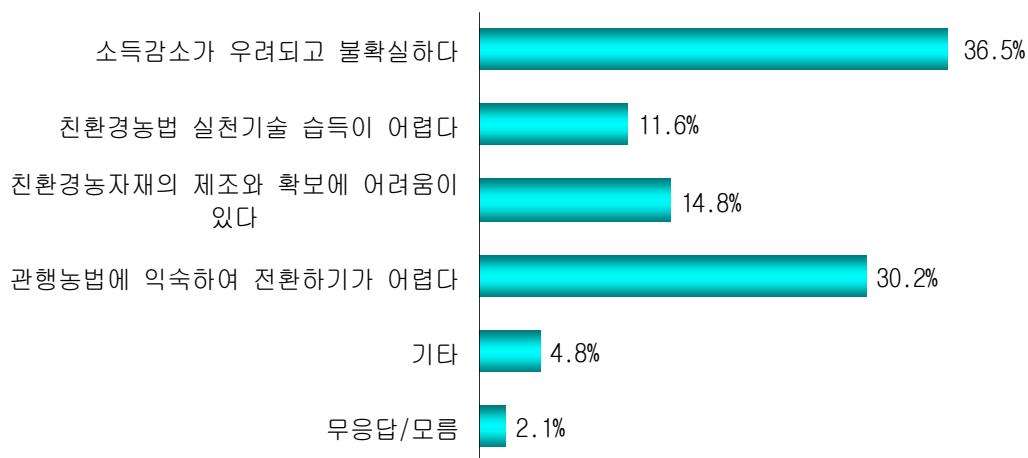
3.6. 소득 감소 우려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피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농가는 42.3%, ‘실천할 예정이다’라는 농가는 24.9%로 나타났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농가가 28.5%로 집계됐다.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을 꼽았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농가는 그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 36.5%, ‘관행농법에 익숙해 전환에 어려움’(30.2%)을 꼽았으나, 26.4%는 기술과 자재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어 기술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농업인)



3.7. 도시민, 친환경농산물 선호하지만 인증내용은 잘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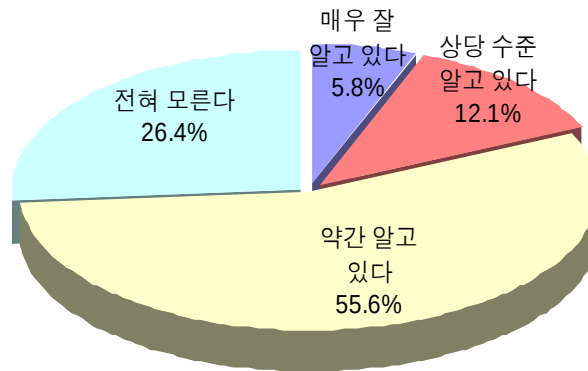
도시민 78.5%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83.8%)를 1순위로, ‘영양가가 높을것 같아서’(23.6%)를 2순위로 꼽았다.

반면, 높은 관심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으로 인증단계를 ‘상당수준 알고 있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17.9%에 그쳤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 대해서는 도시민 과반수(50.2%)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8%로 집계되었다.

도시민들의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도는 78.1%, 수입 유기농산물 신뢰도는 1.8%로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9. 친환경농산물 인증 내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 정도(도시민)



4. 농촌생활 여건과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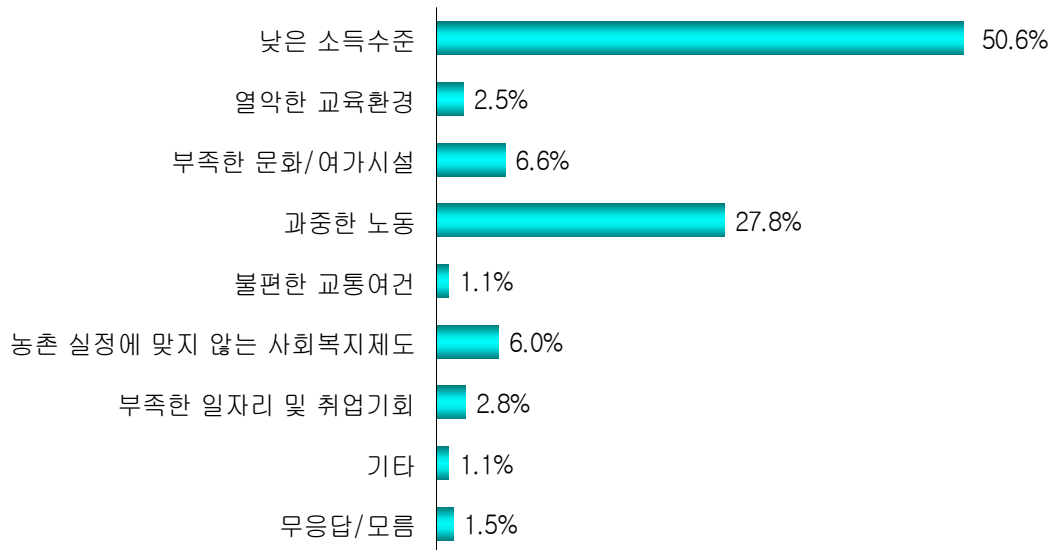
4.1. 농촌생활 어려움 '낮은 소득'과 '과중한 노동'이 주 요인

농업인들은 농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낮은 소득'(50.6%), '과중한 노동'(27.8%), '부족한 문화/여가시설'(6.6%)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대표적으로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증진 시설 확충'(28.1%), '농촌지역 사업체에 투자확대'(27.8%)를 꼽았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복지분야로는 대표적으로 '노인복지'(60.8%), '저소득층복지'(22.8%)를 꼽았다.

그림 10. 농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농업인)



4.2.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 도-농간 ‘뚜렷한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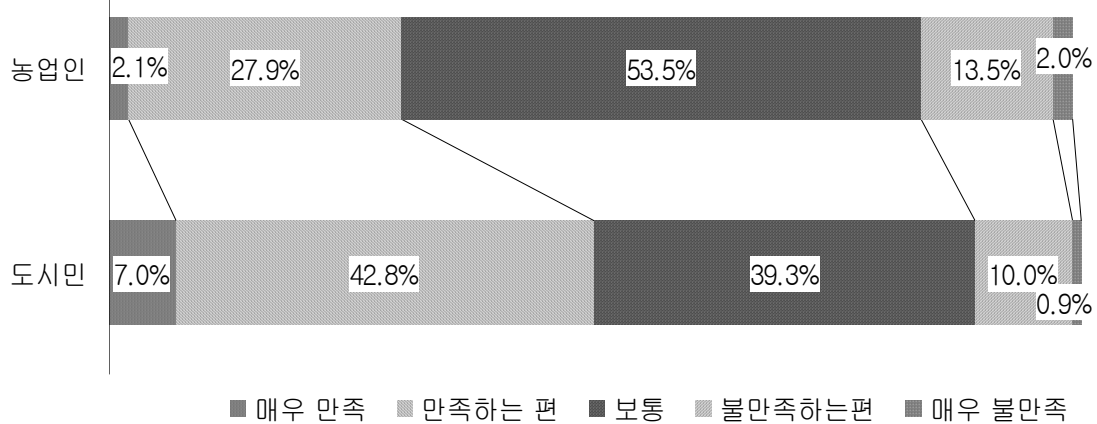
농업인 30.0%가 현재 거주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포함)고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의 49.8%가 만족한다(매우 포함)고 응답해 거주지역의 주거환경만족도는 19.8%p의 도-농 격차를 보였다.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농업인의 13.1%가 삶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해 도시민의 19.3%에 비해 6.2%p 의견 차이를 보였다.

’06년 조사결과²⁾와 비교하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주거환경 및 삶의 질 만족도가 10% 미만에서 상승하였다.

2)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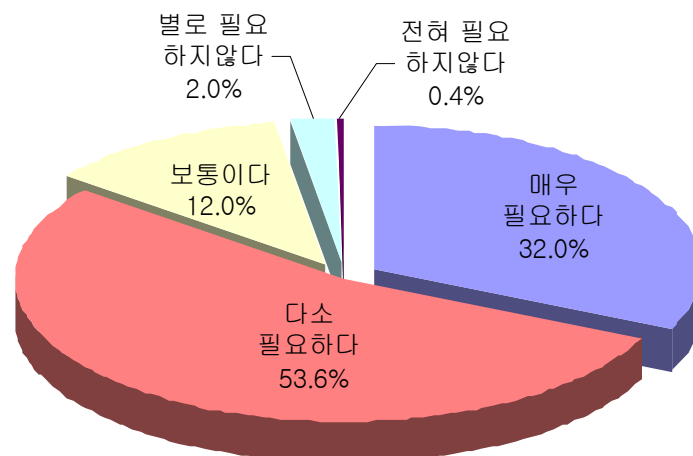
그림 11.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4.3. 도시민,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 73.3%로 높은 지지율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도시민은 ‘매우 필요’, ‘다소 필요’를 합쳐 85.6%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12.0%는 ‘보통이다’로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림 12.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 필요성 여부(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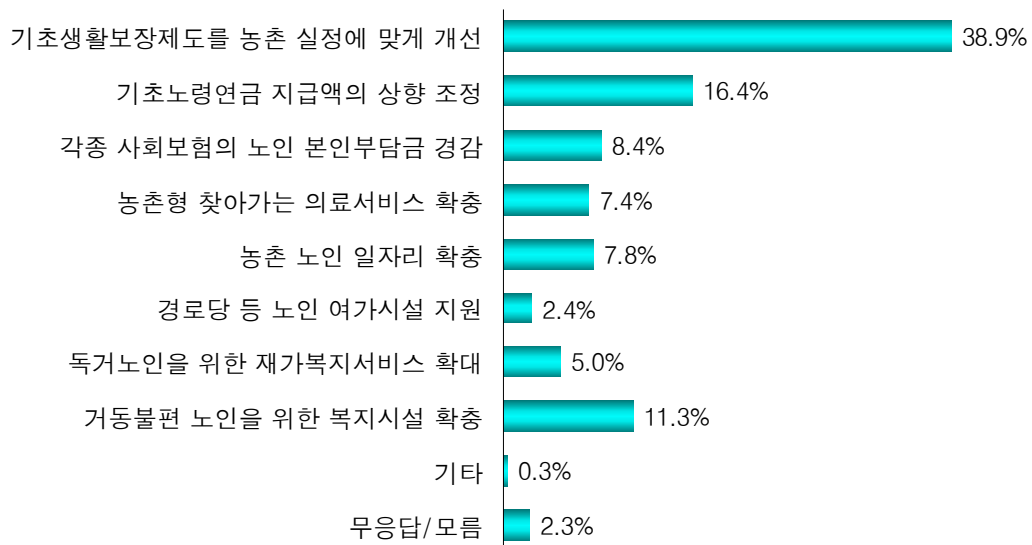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73.3%가 찬성했고, 반대는 4.0%에 그쳐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찬성비율은 '06년 조사결과보다 2.1%p 소폭 하락하였다.

도시민들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우선적인 지원책으로 ‘생활비 지원’, ‘아플 때 교통수단 지원’, ‘먹을거리 지원’, ‘경로 돌봄이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4.4.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촌실정 맞게 개선 절실”

농업인들은 농촌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선진복지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38.9%),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정’(16.4%),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11.3%)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림 13.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 또는 개선해야 할 선진복지정책(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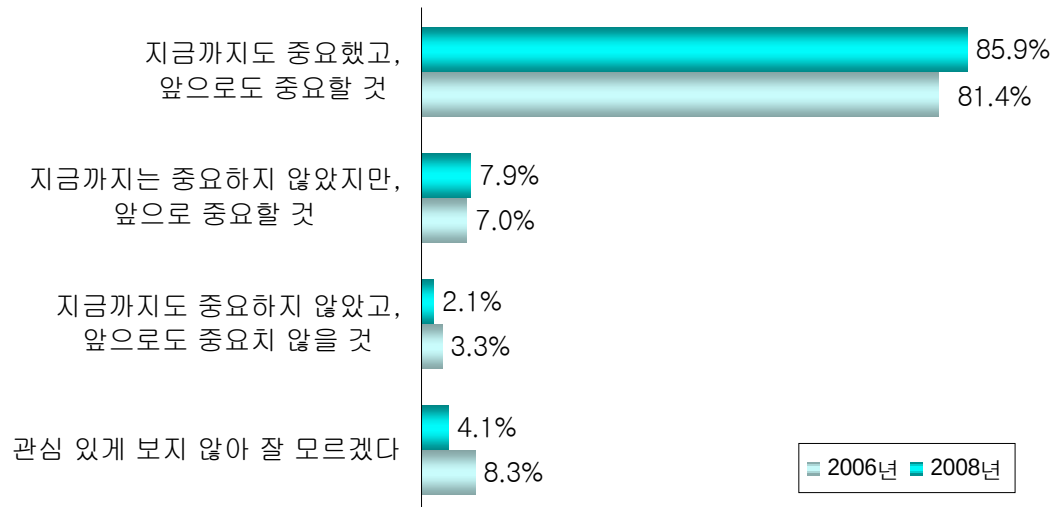


5.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5.1. 도시민 93.8% “농업·농촌 앞으로도 중요할 것”

농업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도시민의 인식 비율 85.9%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 7.9%를 합쳐 도시민의 93.8%가 향후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림 14. 농업·농촌 역할의 중요성 인식(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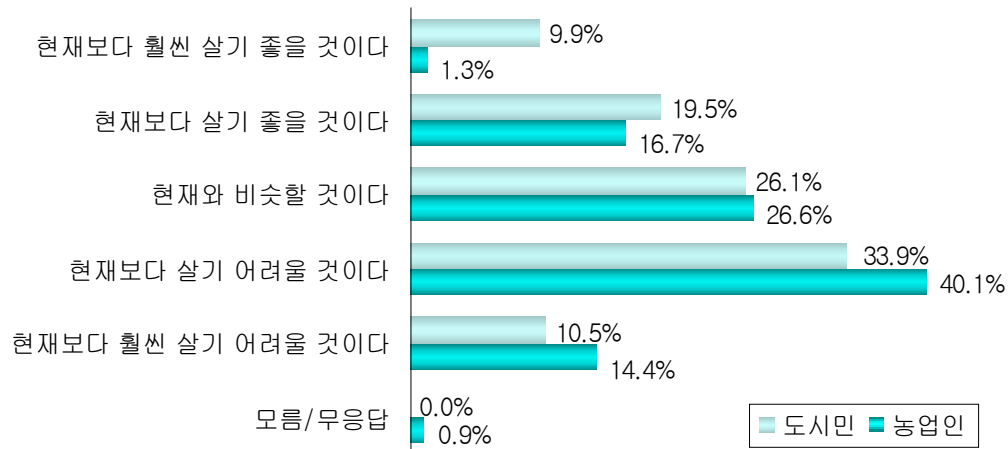
이같은 결과는 2년전 조사결과보다 5.4%p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10년 후 농촌 살기 좋아질 것' 도시민 29.4%, 농업인 18.0%로 감소세

10년 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한 도시민 비율이 '99년 47.6%에서 '06년 33.5%, '08년 29.4%로 긍정적인 전망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18.0% 그쳐 도시민과 차이를 보였다. 농업인 22.6%는 현재 농촌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36.8%의 농업인 중 53.4%가 '생활환경'과 '의료시설' 등 복지 미흡을 이유로 꼽았으며, 교육여건도 10.2%로 나타났다.

그림 15.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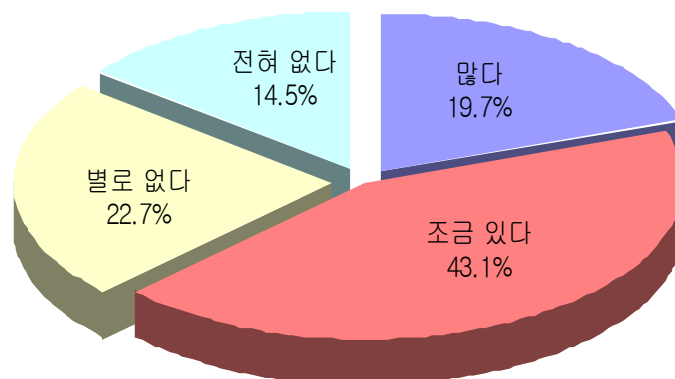


5.3. 도시민 62.8%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있다”

도시민의 농촌거주 의향에 대해 62.8%가 매우 많거나 조금 있다고 응답했고, 거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81.4%가 거주 시기를 ‘10년 후 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해 실제 귀농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도시민의 농촌거주 의향은 '06년 조사결과(71.3%)보다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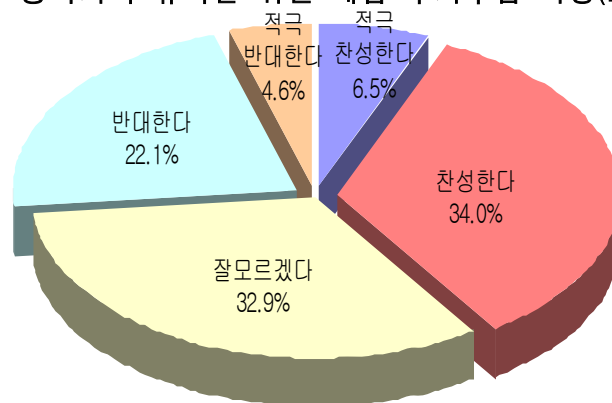


5.4. 농촌의 공익기능가치 유지 지원의지 약화 추세

도시민의 91.9%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가 많다’는 적극적인 인정도 63.4%로 집계되었다.

공익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에는 40.5%가 찬성해 '06년 52.8%에 비해 지지도가 약화되는 추세이다.

그림 17. 농촌의 공익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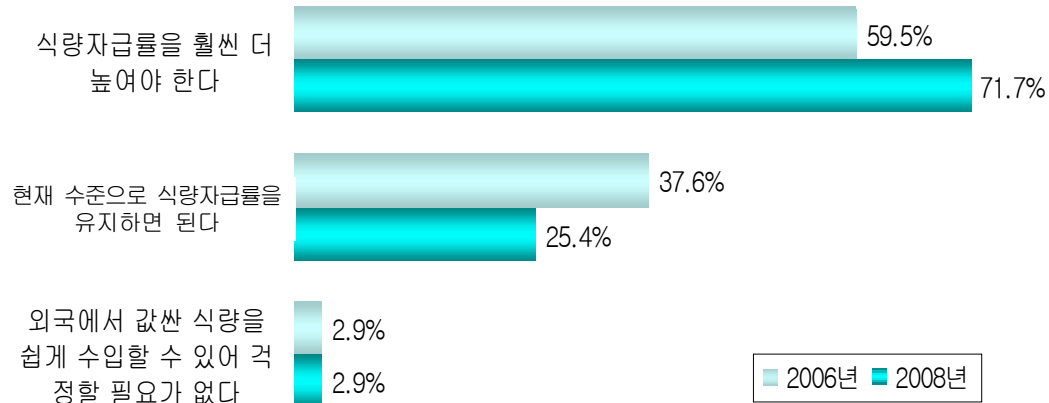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장개방은 안된다’거나 ‘수입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농업보호 의식도 지난해와 비슷한 60.4% 수준에 그쳐 하락추세에 있다.

전반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키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인색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어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경제성 부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5.5. “식량자급률 훨씬 더 높여야” '06년 비해 12.2%p 증가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06년 59.5%까지 하락했으나 '08년 71.7%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국제곡물가격 급등 및 식량자급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짐으로써 나타난 반응으로 보인다.

그림 18. 식량자급도에 대한 의식(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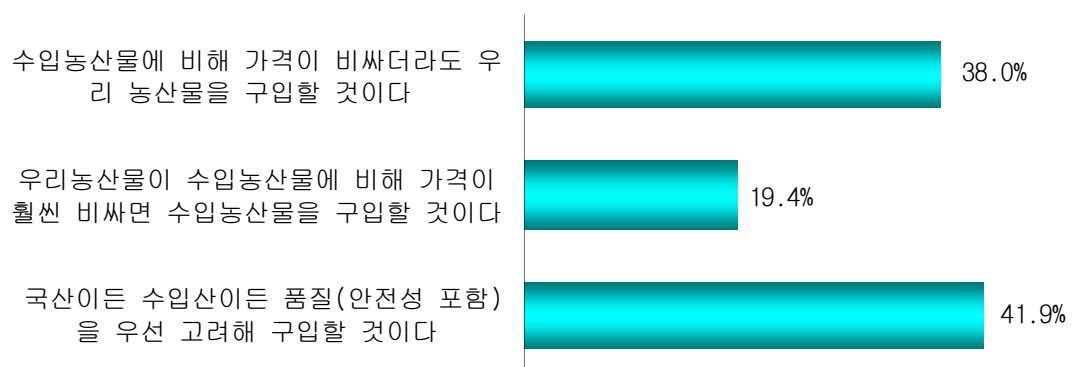


5.6.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산물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실리 우선”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을 우선해 구입할 것’이라는 도시민이 41.9%로 가장 많고,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도 19.4%로 나타나 도시민의 61.3%는 실리를 우선하였다.

반면,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도시민은 38.0%에 그쳤으나 '06년 조사결과보다는 2%p 상승하였다.

그림 19.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시 우리농산물 구입 의지(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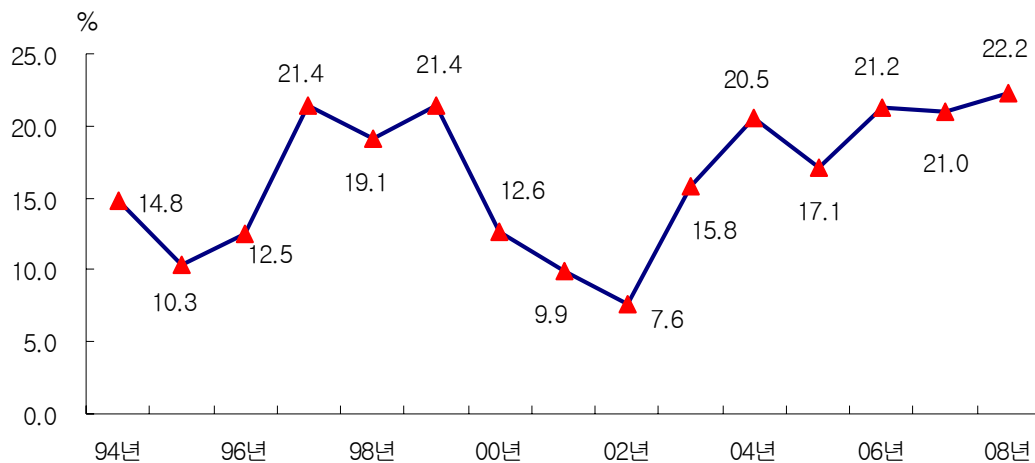


5.7. 농업종사 직업만족도 22.2%로 꾸준한 상승세

UR 출범 이후 등락을 거듭해 오던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해 2008년도에도 22.2%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불만족 한다’는 43.6%의 농업인은 불만요인으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44.8%)와 ‘수입개방으로 장래불안’(2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림 20. UR출범 이후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변화 추이(매우 만족+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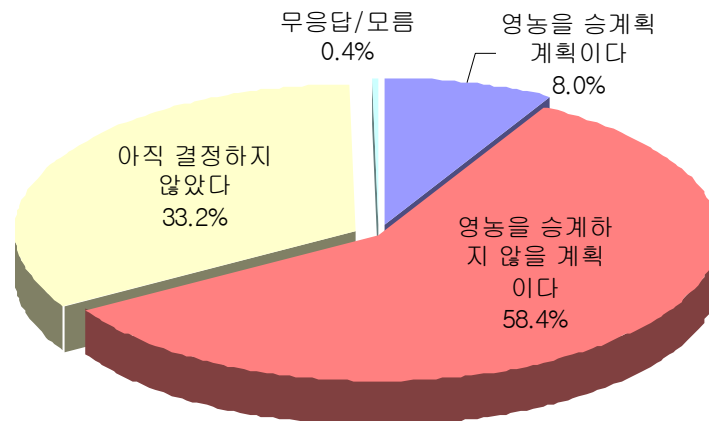


5.8. 농업인 절반 이상 “영농 승계하지 않겠다”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농업인은 8.0%에 그쳤고, ‘승계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8.4%,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3.2%로 나타나 영농 승계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향이 없다는 농업인은 은퇴 후 농지를 ‘매각’(21.1%), ‘임대’(27.5%)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그림 21. 농업인의 영농승계 의향



6. 시사점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실시한 이번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은 중요 농업정책 1순위로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을 꼽아 새정부 출범직전 주문과 일치하였다. 그만큼 국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할 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96.5%)에서 최근 1년새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30% 이상의 생산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새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중 6명이 ‘가능성 있다’고 응답해 지지와 기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민들의 수입농산물, 특히 수입쌀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구매 기피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쇠고기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도시민이 10명 중 3명으로 나타나 한우 안전성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원산지표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45.4%가 실효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의 78.5%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정작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못하는 농가는 그 이유를 기술과 자재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들고 있어 기술지도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도-농 격차는 여전히 높아 각 19.8%p, 6.2%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농촌생활여건과 복지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화’를 꼽아 새정부 농촌 복지정책에 이 같은 여론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은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낮게 평가하여 각 29.4%, 18.0%에 그쳤으며, 도시민들의 농업·농촌 공익가치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제시와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및 기능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식량자급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는 도시민이 전년 대비 12.2%p나 증가하였고,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문제 해결에 도시민의 동참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일정부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인 도시민은 안전한 식품 공급과 휴식공간으로서의 농업·농촌이 유지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며, 농업인은 개방피해 대책과 고령농업인 대책, 교육 등 주거여건 확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들의 바람이 향후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